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

2022. 12. 28.

순 서

I.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III. 2023년 8대 핵심 추진과제	4
1.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4
2.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5
3.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6
4. 디지털 일상화	7
5. K-디지털 글로벌 확산	8
6.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실현	9
7.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육성·확보	10
8.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12

I. 추진성과와 평가

- (우주경제 실현) 누리호(6.21), 다누리(8.5) 발사로 위성·발사체에 더해 우주(달) 탐사 자체기술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 우주경제 비전 선포(7.6), 로드맵(11.28),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2.21) 등 달을 넘어 화성 향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청사진 제시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뉴욕구상(9.21), 디지털 전략(9.28)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 및 액션플랜 제시, 글로벌 논의 선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출범(9.2),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신설(데이터정책위, 9.14)로 국가 디지털정책 추진체계 재정립
 - 85개시 모든 행정동, 주요 읍면에 5G망 구축을 완료하고(12월), 데이터센터 화재(디지털서비스 장애) 신속 복구 지원 및 대책 마련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기술패권 시대,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12대 전략기술 선정(10.28) 및 국가임무(Mission) 중심 R&D체계 전환
 - * 예 : (국가임무) '28년 세계최초 6G 상용화 → (R&D 목표) '26년 Pre-6G 기술 확보
 - 5년간 25조원 투자목표 제시 및 민관협약체(11.23) 운영 등 기반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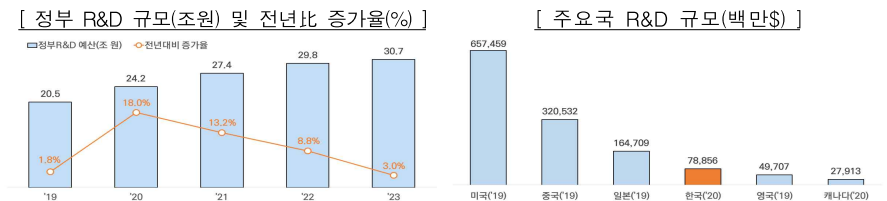
◇ **[평가]**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 마련 (민간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

II.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기술패권 경쟁, 4차 산업혁명(디지털 혁명) 등 기술적 대변혁기 맞아,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으로서 R&D의 역할 증대
 - 그간 우리 R&D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정부 30조, 정부+민간 100조), 주요국 대비 여전히 부족하며 급격한 증대도 제약

☞ R&D 투자면에서 전략성, 성과면에서 효과성(임팩트)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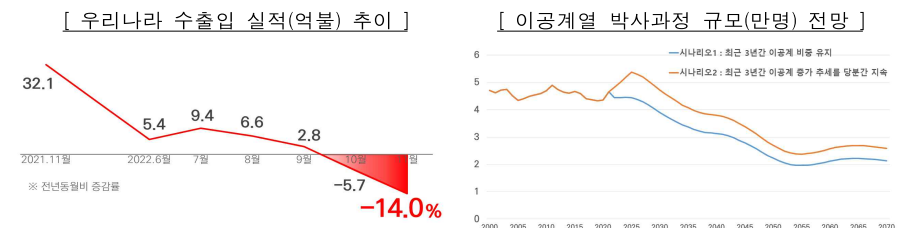


- 저성장 및 잠재성장률 둔화에 이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 글로벌 복합위기 속 감소세 전환
 - * '23년 반도체 사이클 하강, 대중 수출 둔화로 하락세 지속 전망('22.11월, KISDI)
- 반면 혁신도구인 AI 등 우리 디지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
 - * 세계8위, 인구 2천만 이상 국가중에는 2위(1위 미국)('22.9월, IMD)

☞ K-디지털 통한 경제·사회 생산성 향상으로 재도약 기여 가능

- 국가의 기술수준은 인재가 결정하나, 혁신인재의 절대량 축소중
 - * '25년 이공계 대학원생 감소세 본격화('22.10월, STEPI)

☞ 탁월한 연구자의 성장 지원과 글로벌 인재의 유입 유도 요청



2 업무추진 방향

◇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의 3대 방향에서 8대 핵심과제 추진

⇒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도약 전인

비
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3대
추진
방향

전략기술,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8대
핵심
과제

1.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2.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3.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4. 디지털 일상화

5. K-디지털 글로벌 확산

6.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실현

7.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육성·확보

8.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Ⅲ. 2023년 8대 핵심 추진과제

1.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 **개별기술**(위성·발사체) 확보 넘어 **산업생태계** 본격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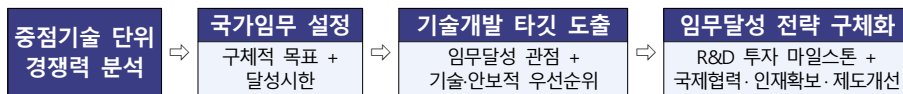
- (독자적 우주탐사기술 고도화) 누리호 3차발사('23.上), 재사용 기술과 다단연소 엔진 적용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 착수('23~'32, 2조 132억원)
 - 달 궤도선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고, 달 표면 연착륙 실증과 임무 수행으로 탐사역량 강화('24~'33, 6,286억원)
 -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예타 추진('23년)
 - 랑데부·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 및 포집위성, 달 궤도 투입성능검증위성, 부품검증위성 등 기술검증위성 개발 추진('23)
-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제 구축) 전용펀드('23, 50억원),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23.下) 및 위성 활용 등 우주서비스 산업 창출**
 - * 로드맵 바탕으로 우주개발 핵심기술 및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추진
 - **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3.하)
- 조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및 국가안보 대응력 강화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추진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 예타 추진('23) 등 민간 개발역량 제고
 - *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 우주기술연구센터육성 시범사업* 기획('23), 공공연구시설·장비 조사 및 공개 등 우주산업 기업 및 인력양성 지원
 - * 소형(연2억), 중·대형(연5억)으로 10년 장기지원, 우주뿐 아니라 타분야 융합분야 지정
- (우주항공청 설립) 상세임무·특례규정 등의 일괄타결 및 향후 설립취지 따른 안정적 운영성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
 - * 특별법 상정('23.상) → 직제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23.하)
- 우주항공기술 및 제도, 기술사업화 등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및 의견 수렴
 - * (자문단 운영안) 1백여명의 전문가 자문단 pool 구성 → 릴레이 간담회 개최

2.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 민관협업 기반으로 국가적 핵심임무에 전략적 투자 확대

- (투자확대 및 통합적 재원배분) 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27년까지 5년간 25조원 중점 투자
 - 종전의 부처간 칸막이식 방식을 탈피해, 범부처와 민간의 투자를 고려한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본격 운영하고,
 - 민간R&D 협의체(9→11개) 및 국가기술전략센터(4→7개) 확대·운영
- (민관합동 R&D 프로젝트 착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국가의 역할을 총결집하는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운영
 - *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특히 집중해야 할 총 10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착수
 - ** '23년 2개 프로젝트 착수(SMR·양자) 및 8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 과기자문회의 내 민간 전문가(기술·외교·정책)가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특위(2월)* 및 기술별 조정위('23.上) 등 민관협업 거버넌스도 지속 확충
 - * (주요 기능) ▲국가차원 기술육성 실행전략 수립 ▲전략기술 관련 범부처 정책조정 ▲기술·산업동향, 글로벌 협력의제 등 기술·정책이슈 상시 대응
- (임무중심 R&D 정착) 12대 전략기술별로 로드맵을 수립('23년 10개), 국가차원의 임무와 달성시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주요내용 】



- * ('23.上) 민관·부처협업 시급성 높은 3개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23.下) 미래 성장가능성 높은 7개 :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
-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핵심 연구자산의 유출방지 위해 해외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병행
 - * 사업 전략과 로드맵의 정합성 점검, 필요시 특정평가 통해 심층분석

3.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 양자·바이오·탄소중립 6G·메타버스 기술 등의 중점 육성 및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딥사이언스 창업과 스케일업 활성화 병행

최신기술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먹거리화 지원

- (양자) 관련기술 법령 제정 추진, 양자기술 전략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양자컴퓨팅·통신·센싱 등 '23년 984억원)
- (첨단바이오) 생산성을 향상시킬 디지털 융합형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의사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및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
 - * 바이오파운드리,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등 / ** 유전자 편집·제어, 줄기세포 등
- (탄소중립) 안전성·경제성 우수 혁신형 SMR 개발('23년 31억원), 탄소포집(CCUS) 원천기술 개발('23년 1,197억원) 등 추진
- (6G)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 병행개발*, 자율주행·UAM 육성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 마련('23.上)
 - * 체계적·종합적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타 사업 기획·시행 추진
- (메타버스·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23년 883억원),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23년 330억원),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23년 234억원)
 - * 온라인 주민투표,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등

도전적 연구개발(R&D)을 통한 임팩트 강화

- (한계도전 R&D) 10~20년 뒤를 책임질 변혁적 기술 개발 위한 프로젝트('23년 147억원) 및 국가R&D 도전·혁신성 강화
 - * 임무중심형 R&D 및 Open-Innovation형 기획(공청회, 국민참여 등) 확대
-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기술스케일업 신속 지원체계 구축* 및 미성숙 초기기술 대상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 제도 도입
 - * 사업화 지향 R&D 확대,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산학연 컨소시엄 대형 스케일업 등
- 연구자 창업 제도 도입 등 범부처 포괄적 연구성과 관리 위한 (가칭) 연구성과확산촉진법 제정('23.上) 및 공공TLO 혁신* 추진
 - * 민간전문가(조직) 활용 확대 통한 가능 강화, TLO 내 자체 지원트랙 신설 등

4. 디지털 일상화

◆ 그동안 축적한 AI 역량 위에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AI) 환경 확산

- (AI 일상화 元年) 국민일상 밀집 분야에서 AI 활용 민생·사회현안 해결 사업화 통해, 대규모 AI수요 창출 및 AI공급역량 확충
 - * 독거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현안 해결 「AI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 농어업·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신성장 4.0전략」과 연계한 분야별 디지털 확산(“Digital Everywhere”)
- SaaS(“SW as a Service”, 서비스 구매방식) 중심의 클라우드 확산을 통한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및 본격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 SW기반 기존 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추진) 초거대 AI인프라(허브) 구축(‘23년 121억원)
 - 대국민 서비스 획기적 개선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프로젝트」 구현(‘23년 90억원) 및 지능형 AI모델 활용한 디지털 국회*·법원 단계적 지원
 - * AI학습용 국회 데이터 구축(‘23년, 25억원) 및 AI 서비스(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동요약, 회의록 기반 AI 챗봇 등) 개발 추진

과제(안)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안)
청약 자격검증·맞춤형 추천	원클릭 청약 자격검증·가점계산, AI 기반 개인별 맞춤형 청약 추천
간편하게 국가 조달 신청	차세대 나라장터와 연계해 서류제출 최소화·자동입력, 최적 조달 추천
디지털 지갑	전자증명서·디지털지갑 간 상호연동 위한 표준화 및 보안체계 마련

- (전국민 디지털 네이티브化)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및 초·중등 정보교육 2배 확대 시행(‘25년~) 대비 교육기반** 준비
 - * 민간 에듀테크 기업, 비영리교육기관(entry, code.org 등)과 연계 구축 등
 - ** 정보교사·교육과정 확충 및 AI선도학교 확대(1,200개) 등
-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 위한 디지털배움터 확대(900→1,000개소)
 - * 강사 4,000명 채용 및 70만명 온라인 병행 교육

5. K-디지털 글로벌 확산

◆ K-디지털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 (디지털 新질서 주도)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9월)을 비롯해,
 -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규율하는 디지털경제 기반법제 마련 추진
- ① (기반 : (가칭)디지털사회기본법)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철학과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쏠사회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② (경제 : AI기본법) 디지털경제의 근간인 AI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3위)으로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구축 및 신뢰성 확보
 - ③ (新산업 : 메타버스트특별법) 메타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산업육성 및 자율규제, 기술개발 등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④ (민생·복지 : 디지털포용법) 누구나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쏠국민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사회의 책무 규정
- G20, OECD, 세계은행 통해 뉴욕구상 가치 공유 및 글로벌 논의 주도
 -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예) NIPA, ICT대연합, KISDI 등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안이슈 수집·분석 체계 조직
 - (세계최고 K-클라우드)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서비스에 이르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23년 428억원) 추진
 - * 향상된 AI서비스, 극저전력 AI반도체 활용으로 탄소중립 기여 등 기대
 - 클라우드 이용 확대, 서비스형 SW(SaaS)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센터 지원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 수립(23.下)
 - (K-디지털 해외진출 지원) 수출 유망국가를 발굴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23년)하고, IT지원센터(6개)·KIC(4개) 운영
 - 국내 OTT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10월)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 With-플랫폼 선도프로젝트(3건) 추진 및 “디지털 동반진출 협의회” 발족
 - 유망한 디지털 청년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조성(‘23년, 금융위 등 공동)
 - AI 융합 우수인재 양성 위한 국제 공동교육 프로그램* 신설
 - * AI 분야 국내 석·박사 학생(30명)을 토포토대 파견·교육(6개월)

6.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 디지털 장애가 반복되지 않고,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

-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사고시 가동하는 디지털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개편, 예방-대비-대응-복구 전주기 재난관리 강화(~'23.6월)
 - 분산된 재난대응 규정 종합 「(가칭)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추진
 - 안전하고 끊임없는 디지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 수립·시행('23.1분기)
-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국민 보호 강화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 및 제로트러스트 등 新 보안모델 적용 본격화
- (디지털 기반 국민 안심 제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개발, 대포폰 근절 위한 개통절차 강화, 간편신고 체계 구축('23.上)
 - 스톱킹 범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추위 등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
 - * (지능형 CCTV) 세종시, 서초구 등, (실내 위치정보 정밀추위) 도봉경찰서 등 실증
- (디지털 포용 확대) 농어촌 주민의 통신혜택 소외방지를 위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24.상) 및 초고속인터넷망 확충('23년 482개 마을)
 - 취약계층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 위한 '보편바우처*' 시범도입('23.下), 취약계층 디지털교육 강화, 장애인 ICT 보조기기 보급 확대
 - * 요금납부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앱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에도 사용가능
 - 5G 어르신 요금제 및 요금제 중간구간 다양화(예 : 40~100GB 등) 추진
 -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하고('22년 누적 5.3만대 → '23년 4,400대 추가),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LTE→5G로 전환('22년 4,200대 → '23년 2.5만대 추가)

7.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육성·확보

◆ 육성 및 확보 경로 다변화 통해 초일류 인재기반 공고화

육성 Track I : 신속·탄력적 육성

- (전략기술별 맞춤형 인재 육성) 분야별 중견급 선도 연구자 인력 분석 통해 핵심인력 현황을 관리하고, 기초연구와 연계해 성장 지원
 - * 중견·리더급 R&D지원(개인기초 중견·리더), 집단연구(혁신연구센터, ERC/SRC, IBS) 활용
- (기업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기업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교육 전 과정에 참여·협력하는 민간 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확대 ('22년 9,500명 → '23년 1만명 이상)
 -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확산을 지원하고, 우수교육 기업 대상 '디지털 리더스 클럽' 선정 추진
 -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인재 발굴부터 육성, 채용 등 전 주기 인재양성 체계
-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중·고·대학생 초급 화이트해커*를 중급수준 화이트해커로 양성하는 "화이트햇스쿨" 과정 신설·운영(연 300명)
 - * 악의적 사이버공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방어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 재능있는 인재 대상 교육 지원으로 리더급 화이트해커 양성(연 190명)

육성 Track II : 장기·지속적 성장 지원

- (대학·출연(연) 연계)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장기적 성장 지원
 - 혁신연구센터(IRC)* 통해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결집,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우수 신진연구자 참여 및 석박사 육성기능 강화
 - * Innovation Research Center : 이공계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그룹에 대해 최대 10년 간 연 50억원 규모로 지원

- 과기원, 혁신연구센터·선도연구센터*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청년 연구자 병역제도 개선** 및 대통령·대학원 과학장학금 신설 추진
* 세종과학펠로우십, 키우리(KIURI) 등 / ** 과학기술전문사관 확대(현 25명) 등
- 세계적인 석학급 과학기술인이 도전적 연구 등 원하는 분야에서 장기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자’ 선정(5년간 100명, ‘23년 20명) 및 활동 지원
- (우수인재 집중육성)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한우물파기”(10년간 연 최대 2억원)와,
 - 우수 디지털인재의 성장 주주기를 지원하는 “재능사다리” 지원
* 선발절차와 평가 강화, 프로젝트X 도입 등 교육방식 다양화, 교육생 수준 진단 통해 ①해외(글로벌 트랙) ②최고전문가(스페셜 트랙) ③후속과정(청년성장 트랙)으로 성장 지원
- (미래세대)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SW·AI 교육 위해 초·중·고 단계부터 AI·SW 교육 전면화 추진
*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23.上)

확보 : 글로벌(해외) 인재의 유입·정착 지원 병행

- 발굴→유치→정착지원으로 해외 석학급 50명/신진급 1,000명(5년) 확보
 - (발굴·교류) 세계 한인과학자 대회*(‘23년 예정), 국제과학기술교류회 등 통한 우수 연구자 현황 분석 및 연구 교류 교두보 마련
* 재외 한인과학자를 격려하고, 국내 연구자와의 교류·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초청
 - (유치·활용) 기관 중심 하향식 유치 사업을 신설하고,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석학급 유치사업 활용 확대
 - (정착지원) 우수연구자 특별비자(사이언스 카드)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전담기구 신설 검토, 정주환경 개선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 장관 추천 시 국내 체류기간 및 배우자·부모 초청, 영주권 취득 상 우대

8.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 지역에서 양성된 우수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가 다시 지역에서 취업·성장해 나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 연구역량 확충) 지역 주도, 정부 지원의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 연구역량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 선도연구개발지원단(신규 5개) 및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를 지정(‘23.上) 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능 강화
 - 지역 주도*로 중장기 현안해결 프로젝트를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선도기술 확보 및 기술격차 극복
* 14개 시도가 테마기술을 발굴(bottom-up)하고, 정부의 컨설팅(top-down)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기획 고도화 → 4대 권역, 5개 과제 추진(‘23년 신규, 77억원)
 - 지역대학·출연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간 연계 및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해,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혁신 거점 구축
* 4대 권역별 지역대학과 출연연 간 협력 플랫폼(‘23년 신규, 52.4억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역사업 연계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 각 지자체별 디지털 관련 정책을 종합·연계한 ‘지역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1분기) 및 지역 디지털 과제 발굴 위한 ‘지방시대위원회(출범예정)’ 협력 강화
 - 권역별 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AI 지역융합사업* 추진
* 광주(AI 인프라), 강원(AI 의료·건강), 영남(AI 자율제조), 충청(AI·메타버스 융합) 등
 -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화 디지털 신산업 성장 여건·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 지원
* 시범지역 2곳을 선정(공모)하여 디지털 인프라 집적 등 초기 조성비(지역당 22억원) 지원, 지자체가 추진중인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에타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농어촌에 디지털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 생활편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빌리지 확대(‘22년 100억 → ‘23년 632억원)
 -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23년 1개소, ‘26년까지 4개권역 확대)